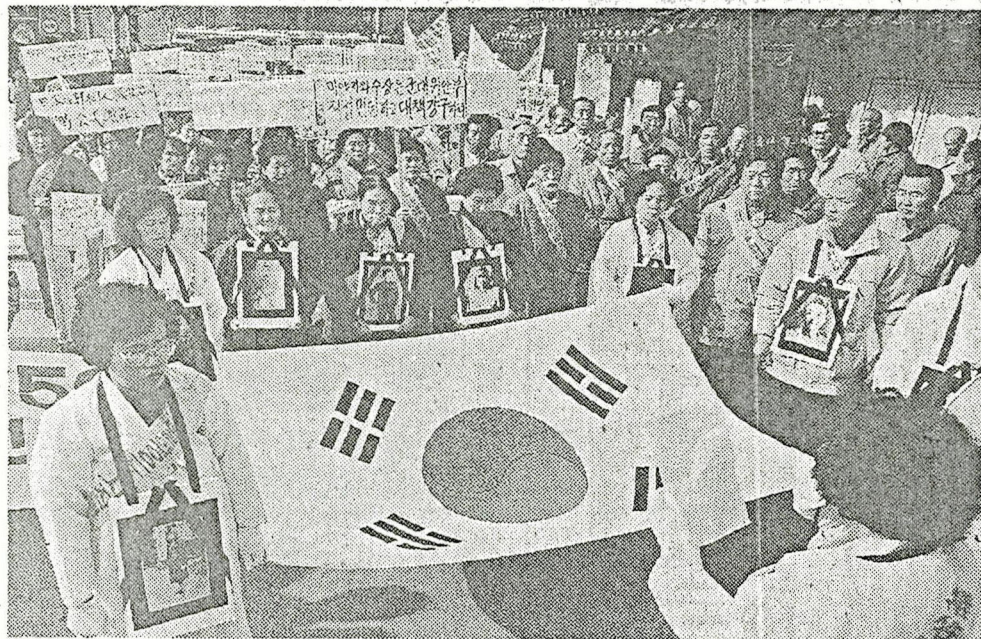


裁判통한 배상은 “말장난”



얼버무림 더 분통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韓日 양국정부의 정신대등 미청산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자세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. 사진은 미야자와 日本수상 방한기간동안의 항일시위장면.

의 죽음만 가져왔다는 자
타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
다.
그러나 유족회들은 이같은
부정적 평가속에서도
이를 새로운 문제해결의
전기로 삼는다는 방침아래
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
모색하고 있다.
이들단체들은 태평양전쟁
당시 정신대뿐만 아니라 한
국민 강제징집 및 용징자의

소멸시효지나 사실상 길막혀 政治的타결외 해결방법 없어

1992. 1. 21

挺身隊
이어린 불어아한다

물론 제의(국교정상화)정
신대정발 사실이 확인되면
서 새틀게 부각된 정신대
문제는 불행했던 과거사의
청산과 새로운 韓日관계의
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정확
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 해
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
당위성을 제기해놓고 있다.
엄밀한 역사적 사실이면
서도 그동안 일본정부의
진실은폐기도와 한국정부
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
자칫 역사의 「뒤안」에 묻
힐 뻔했던 이 문제는 이제
韓日 양국정부가 마땅히 앞
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
된 것이다.
韓日 양국간의 새로운 현
안으로 떠오를 정신대문제는
21일 盧泰愚대통령이 일본
정부에 진상조사를 강력히
요구한 이후부터다.
그러나 태평양전쟁희생
자유족회 정신대문제대책
협의회등 관련단체들은 이
같은 일본측의 일련의 태
도변화에 대해 일시적 미
봉쇄으로서 사태의 본질
을 혼동하려는 구태의연한
좌태에서 벗어나지 못하
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
있다.
미야자와수상의 방한을
전후해 항의시위가 계속되
면서 정신대문제에 대한
국민적여론이 크게 환기됐
고 과거보다는 보다 진일
보한 사과발언을 끌어내긴
했지만 일본정부의 태도에
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
는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
이다.
그 구체적인 실행이 가토
고이치 日本관방장관의 발
언이다. 그는 「일본정부가
지난 65년 日韓기본조약 체결
후에 이미 미야자와수상의
방한을
아자의
방향을
뒤집는 것이
결국 오히려
도, 피해배상과
체적인 화답도
못한채 소멸시효
만을 강행, 애꿎은

해결
앞으로
의견을